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 1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I .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	1
II .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5
1. 종합청렴도	6
2. 외부청렴도	9
3. 내부청렴도	16
4. 정책고객평가	25
5.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30
III . 이슈별 분석	36
IV . 향후 추진계획	42

I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1.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 (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2. 측정 대상 기관 : 총 609개 기관

< '19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교육청 (91개)		공직유관단체 (230개)							계
I유형	II유형	광역시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지원청	I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V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23	22	17	226	17	74	21	38	43	41	15	25	47	609

※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기관규모(정원) 등에 따라 분류¹⁾

※ 교육지원청은 시·도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점수에 포함하여 산출

3. 측정 모형

- **설문조사 결과**(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를 가중합산)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유형만 실시
 - ※ 고의적인 조사대상 명부 조작, 호의적 답변 유도 등 신뢰도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감점, 등급하향 등 제재 조치 가능

1) 중앙행정기관 : I 유형(2,000명 이상), II유형(2,000명 미만)

공직유관단체 : I 유형(3,000명 이상), II유형(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III유형(400명 이상 1,000명 미만), IV유형(200명 이상 400명 미만), V 유형(200명 미만)
- 정원을 우선 고려하되, 동일 업무 수행기관은 동일 유형 분류

< '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는 외부청렴도(0.735)와 내부청렴도(0.265) 가중합산

※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은 외부청렴도(0.622), 내부청렴도(0.224), 정책고객평가(0.154) 가중합산

※ 정책고객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4. 조사 방법

□ 설문 조사

○ 설문조사 대상자(총 238,956명)

측정 영역	규 모(명)	조사 대상
외부청렴도	158,753	'18. 7. 1. ~ '19. 6. 30. 사이에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 대상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	60,904	'19. 6. 30.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정책고객평가	19,299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 정책관련자(지역주민·학부모 ²⁾ 포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최근 1년간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을 설문
-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이메일, 모바일)
- 조사 기간 : '19. 8월 ~ 11월
- 신뢰 수준 : (외부) 95%, ± 0.03 점, (내부) 95%, ± 0.04 점,
(정책고객) 95%, ± 0.07 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 행정기관 부패사건

- 부패행위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의 직위 및 부패금액, 기관정원,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산식에 의해 점수화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

-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와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부패 내용, 관행화·조직화 및 부정적 파급력 정도)를 종합하여 점수화

2) 지역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

5. 주요 개선 내용

□ 측정 범위 합리화

- (대상기관) 청렴노력 유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도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1년 측정을 면제(한국감정원)

* '18년 청렴도 1등급 기관('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 중 '16년~'17년 청렴도 지속 2등급 이상이면서 3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는 공직유관단체

- (대상업무) 국민 안전 관련 업무, 기관 중점 업무 등 신규 측정 업무를 발굴하고, 기존 업무의 측정범위를 확장·현행화

※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식약처), 연구개발 사업 관리, 구매사업 관리, 방위사업 육성(방사청),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지자체) 등

□ 측정 모형 정교화

- 응답 부담 완화 및 측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 조정하여 설문 간소화·정교화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지표 합리화

- 부패사건 발생시점에 따라 감점 반영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부패수준 진단의 타당성 제고

※ 최근 3년('17년~'19년) 발생사건은 가중하고 '16년 이전 발생사건은 감경하여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산정

-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에 전문가들의 정성평가와 함께 기관정원, 부패금액 등을 반영한 정량평가를 종합 반영

- 청렴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 경향에 맞춰 행정기관의 소극행정 징계현황도 감점대상에 포함

II

2019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요약

전체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
전년 대비 0.07점 상승

□ 외부청렴도 영역의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영역 점수는 하락

▶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18년(8.35점) 대비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0.11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0.12점)으로 전년에 비해 모두 상승했으며, 부패경험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민원인의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5%로 전년(0.7%) 대비 감소

▶ 내부청렴도는 7.64점으로 '18년(7.72점) 대비 하락

- 청렴문화 영역(7.64점, +0.01점)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인사·예산집행,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 -0.18점)은 하락
-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0.6%(+0.1%p), 예산집행 관련 부패경험률은 6.3%(+1.2%p),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은 5.8%(+0.1%p)

▶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18년(7.61점) 대비 하락

- 부패인식과 기관의 부패통제에 대한 평가 모두 개선되었으나, 부패경험 점수는 하락하고 부패경험률(2.3%)도 전년(2.1%) 대비 소폭 증가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대상기관은 총 146개 기관으로 376건에 대해 감점 적용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 > 교육청(8.07점) > 중앙행정기관(8.06점) > 기초자치단체(7.99점) > 광역자치단체(7.74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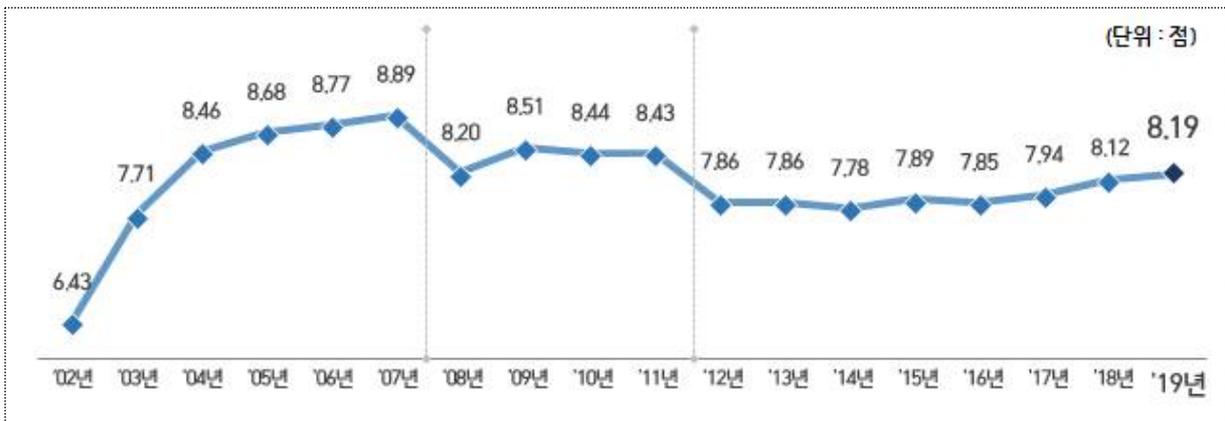
1. 종합청렴도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전체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19점으로, 전년 대비 0.07점 상승

○ '16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가 '16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 청렴도 점수 추이('02년 ~'19년) >



※ '08년, '12년은 모형개편으로 인해 전년도와 시계열 단절

○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 대비 0.12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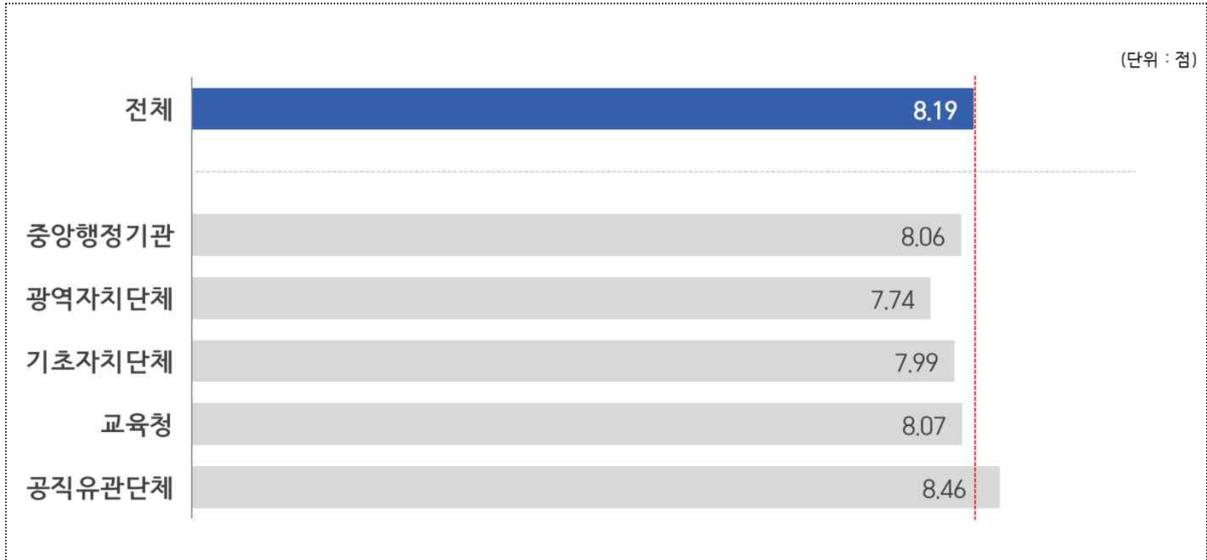
- 내부청렴도는 7.64점, 정책고객평가는 7.45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08점, 0.16점 하락

< 종합청렴도 및 각 영역별 점수 비교('18년~'19년) >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46점)** 종합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7.74점)**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19년) >



②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변화**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각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추이를 보면,
 - 외부청렴도는 대부분의 기관 유형에서 상승한 반면 내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대부분 하락

< 측정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18년 ~'19년) >

구 분	종합청렴도 (점)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정책고객평가 (점)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전체기관	8.12	8.19	▲0.07	8.35	8.47	▲0.12	7.72	7.64	▼0.08	7.61	7.45	▼0.16
중앙행정기관	8.17	8.06	▼0.11	8.53	8.48	▼0.05	7.80	7.62	▼0.18	7.55	7.43	▼0.12
광역자치단체	7.64	7.74	▲0.10	7.92	8.08	▲0.16	7.79	7.82	▲0.03	6.67	6.72	▲0.05
기초자치단체	7.88	7.99	▲0.11	8.01	8.21	▲0.20	7.63	7.51	▼0.12	-	-	-
교육청	7.94	8.07	▲0.13	8.17	8.53	▲0.36	7.99	7.95	▼0.04	7.21	6.65	▼0.56
공직유관단체	8.40	8.46	▲0.06	8.69	8.75	▲0.06	7.77	7.73	▼0.04	8.04	7.91	▼0.13

※ 정책고객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II유형만 실시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인식 관련 추이를 보면,

-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부패 관련 인식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전문가·정책관련자 모두 전년에 비해 개선
- 부패 통제 제도에 대해서는 전문가·정책관련자 집단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공직자의 평가점수는 하락

구 분	외부청렴도 (점)			내부청렴도 (점)			정책고객평가 (점)		
	'18	'19	변화	'18	'19	변화	'18	'19	변화
업무처리 관련 부패 인식 ¹⁾	8.77	8.88	▲0.11	8.09	8.19	▲0.10	7.71	8.04	▲0.33
부패 통제 제도 관련 인식 ²⁾	-	-	-	6.84	6.71	▼0.13	7.37	7.46	▲0.09

- 1)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내부청렴도의 조직문화, 정책고객평가의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임
 2) 내부청렴도의 부패방지제도, 정책고객평가의 부패통제 영역의 점수임(외부청렴도는 관련 항목 없음)

□ 측정 영역별 청렴수준 중 부패경험 관련 추이를 보면,

- '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경험한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지속 감소
- 조직운영 과정에서 공직자가 경험하는 부패경험률과 전문가·정책관련자의 부패경험률은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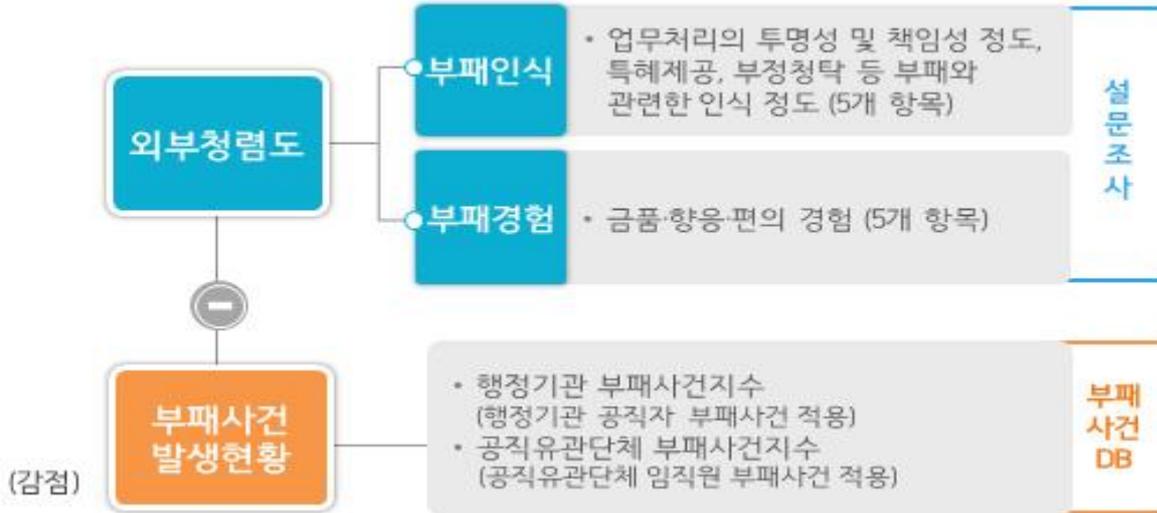
< 최근 5년 외부·내부 청렴도 부패경험률('15년~'19년) >



2. 외부청렴도

□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으로 구성(총 10개 항목)된 설문 조사 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외부청렴도 측정 모형 >



< 외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 (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외부청렴도 점수		8.47	+0.12
부패인식 (0.480)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³⁾ (0.249)	8.94	+0.08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갑질 관행) (0.204)	8.99	+0.0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240)	9.03	+0.05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0.156)	8.61	+0.05
	업무처리의 책임성 (0.151)	8.65	+0.02
부패경험 (0.520)	금품 경험률 (0.118)	7.95	-0.01
	향응 경험률 (0.100)	7.92	+0.03
	편의 경험률 (0.093)	8.14	0.00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0.359)	8.29	+0.25
	금품·향응 경험규모 (0.330)	8.74	+0.08

※ 전년대비 측정항목이 변경된 경우 전년 점수와 단순 비교 불가

3)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문항이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문항으로 통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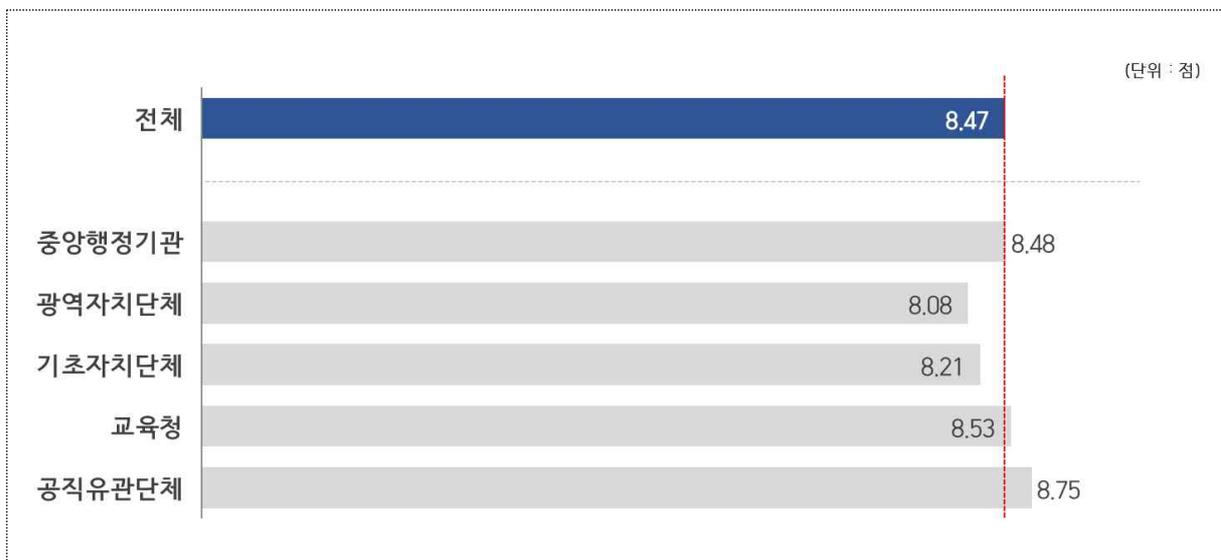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8.47점으로 전년(8.35점) 대비 0.12점 상승**
- 부패인식 영역은 8.88점, 부패경험 영역은 8.35점으로 부패인식 영역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8.75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단체(8.08점)의 외부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점수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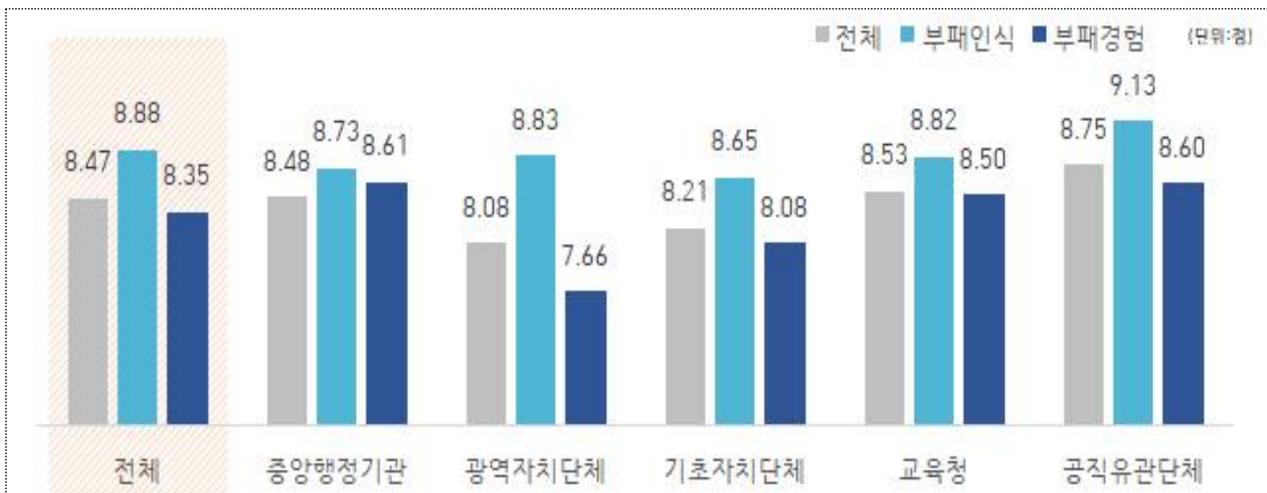
- 전년에 이어 공직유관단체의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높으며, 점수 상승폭이 가장 큰 유형은 교육청(+0.36점)

< 기관유형별 외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세부 영역별로는 부패인식 점수는 공직유관단체(9.13점), 부패경험 점수는 중앙행정기관(8.61점)이 가장 높음

< 외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영역 점수비교 >



② 부패인식 영역 분석

□ 부패인식 측정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항목을 통합하여 설문 간소화

○ 그동안 부패인식 중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으로 측정했으나, 응답자들은 두 항목을 유사하게 인식하는 경향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 통합

※ 설문 문항 :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연·학연·혈연 등에 영향을 받아 일부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 제공

□ 부패인식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가 소폭 상승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고,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

○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은 ‘업무처리 기준 절차의 공개성’ 항목임

< 기관유형별 부패인식 항목별 현황('18년~'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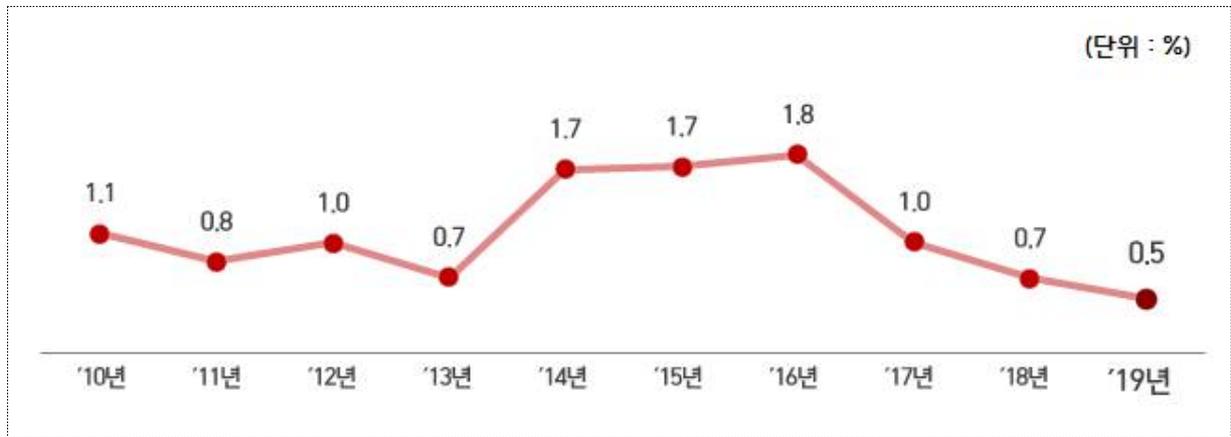
구 분	부패인식		특혜제공		갑질관행		부정청탁		공개성		책임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77	8.88	8.86	8.94	8.94	8.99	8.98	9.03	8.56	8.61	8.63	8.65
중앙행정기관	8.71	8.73	8.89	8.92	8.81	8.74	9.00	8.97	8.37	8.36	8.44	8.43
광역자치단체	8.77	8.83	8.89	8.90	8.84	8.81	8.97	8.96	8.65	8.69	8.68	8.69
기초자치단체	8.44	8.65	8.50	8.65	8.68	8.79	8.63	8.74	8.32	8.49	8.36	8.49
교육청	8.80	8.82	8.84	8.83	8.81	8.81	9.01	8.96	8.68	8.68	8.79	8.74
공직유관단체	9.11	9.13	9.20	9.25	9.23	9.27	9.31	9.33	8.82	8.77	8.92	8.83

③ 부패경험 영역 분석

□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평균 0.5%로 전년(0.7%) 대비 감소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패경험률은 3년 연속 감소

< 금품·향응·편의 제공 전체 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9년은 금품 경험률 0.18%, 향응 경험률 0.18%, 편의 경험률 0.12%의 합

○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모두 전년대비 낮아졌으며, 금품 경험률은 0.09%p(0.27% → 0.18%)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큼

<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4년에 부패경험설문 내용 확대(세분화)

※ '17년까지는 본인의 제공률을, '18년부터는 본인 또는 동료가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의미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도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기관유형별 부패경험률 >

구 분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변화 (‘19-‘18)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체	1.08	0.82	0.99	0.68	1.66	1.68	1.79	1.00	0.67	0.48	▼0.19
중앙행정기관	0.52	0.54	0.59	0.45	1.16	1.18	1.34	0.75	0.34	0.34	0.00
광역자치단체	1.25	0.94	2.13	1.70	3.44	4.36	4.06	1.54	1.13	0.82	▼0.31
기초자치단체	0.96	0.92	1.19	0.80	2.40	2.08	2.29	1.41	1.02	0.65	▼0.37
교육청	2.39	1.63	1.60	1.29	2.40	2.58	2.27	1.51	0.82	0.42	▼0.40
공직유관단체	0.51	0.27	0.27	0.25	0.60	0.67	0.86	0.38	0.29	0.28	▼0.01

< 기관유형별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빈도 및 규모 >

구 분	금품·향응·편의경험 총 빈도(회)	금품·향응·편의경험 총 규모(만원)	금품·향응·편의 경험자 수(명)	응답자 1인당		경험자 1인당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규모(만원)	경험 평균 빈도(회)	경험 평균 ⁴⁾ 규모(만원)
전체	1,812.5	64,943.5	761	0.011	0.41	2.38	85.34
중앙행정기관	115	2,596.5	60	0.007	0.15	1.92	43.28
광역자치단체	226.5	7,520.5	91	0.020	0.68	2.49	82.64
기초자치단체	1,029.5	40,541.5	395	0.017	0.67	2.61	102.64
교육청	86	2,005.5	55	0.007	0.15	1.56	36.46
공직유관단체	355.5	12,279.5	160	0.006	0.22	2.22	76.75

4) 경험자의 평균 규모(만원)에서 편의 경험자는 제외됨

⑤ 공공서비스 유형별 분석

□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를 제공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⁵⁾하여 분석한 결과,

-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금융 및 에너지 분야(8.55점) > 고용·복지(8.54점) > 교육·연구(8.50점) > 산업(8.49점) > 공공안전(8.41점) > SOC(8.37점) > 문화 분야(8.28점) 순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 평균 점수는 고용·복지 및 에너지 분야(8.91점) > 금융(8.87점) > 교육·연구(8.82점) > 산업(8.80점) > 공공안전(8.71점) > SOC 분야(8.56점) > 문화(8.54점) 순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 〉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외부청렴도 항목 점수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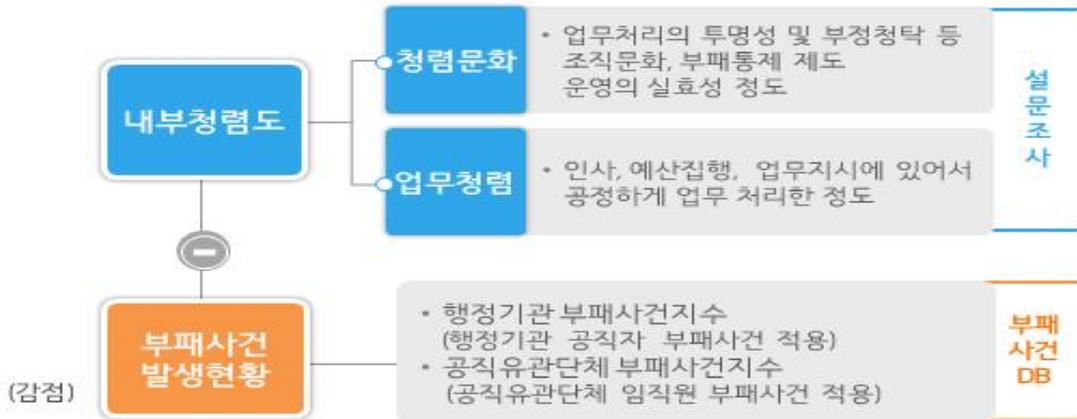
업무유형	전체	에너지	금융	고용·복지	교육·연구	산업	공공안전	SOC	문화
종합청렴도(점)	8.46	8.55	8.55	8.54	8.50	8.49	8.41	8.37	8.28
외부청렴도	8.75	8.91	8.87	8.91	8.82	8.80	8.71	8.56	8.54
부패인식	9.13	9.49	9.23	9.30	9.20	9.18	9.18	8.84	8.98
부패경험	8.60	8.57	8.74	8.73	8.69	8.69	8.50	8.50	8.41

5) 230개 공직유관단체를 SOC(47개), 고용·복지(17개), 공공안전(28개), 교육·연구(46개), 금융(25개), 문화(관광·예술·언론)(19개), 산업(30개), 에너지(18개)로 분류

3. 내부청렴도

□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구성(총 20개 항목)된 설문 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 내부청렴도 측정 모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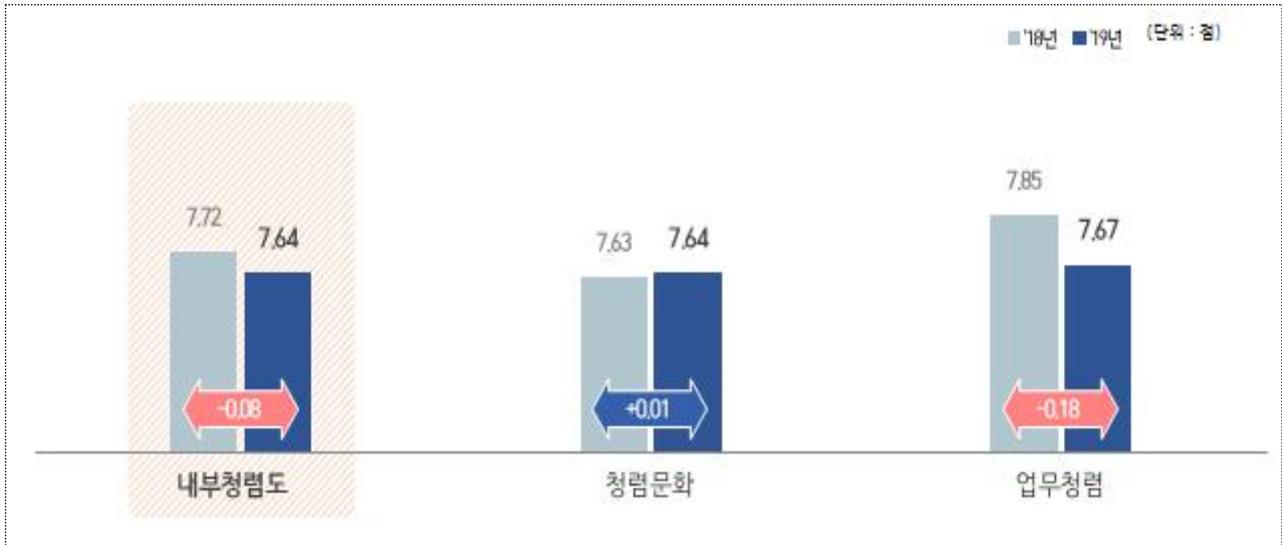
< 내부청렴도 세부측정항목 현황 >

평가영역(가중치)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 대비	
내부청렴도 점수			7.64	-0.08	
청렴 문화 (0.422)	조직 문화 (0.631)	업무처리 투명성 (0.158)	8.08	+0.05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72)	8.34	+0.06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0.165)	7.53	+0.47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75)	8.04	+0.05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48)	8.45	-0.03	
		부패행위의 관행화(금품 등 수수) (0.182)	8.69	+0.01	
	부패방지 제도 (0.369)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22)	6.03	-0.14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81)	6.68	-0.15	
	부정청탁금지 제도 운영의 실효성 (0.297)	7.48	-0.09		
업무 청렴 (0.578)	인사 업무 (0.413)	경험 (0.755)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0.196)	8.15	-0.22
			금품·향응·편의 경험 빈도 (0.415)	8.48	-0.14
			금품·향응·편의 경험 규모 (0.389)	9.08	-0.07
	인식 (0.245)	금품·향응·편의·특혜 제공 (1.000)	7.46	+0.04	
	예산 집행 (0.330)	경험 (0.721)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 (0.209)	6.02	-0.55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빈도 (0.420)	6.66	-0.46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규모 (0.371)	8.49	-0.22
	인식 (0.279)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1.000)	8.03	-0.03	
	업무지시 공정성 (0.257)	경험 (0.706)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0.282)	5.75	+0.04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0.718)	6.67	-0.34
인식 (0.294)			부당한 업무지시 (1.000)	7.99	+0.09

① 전반적 측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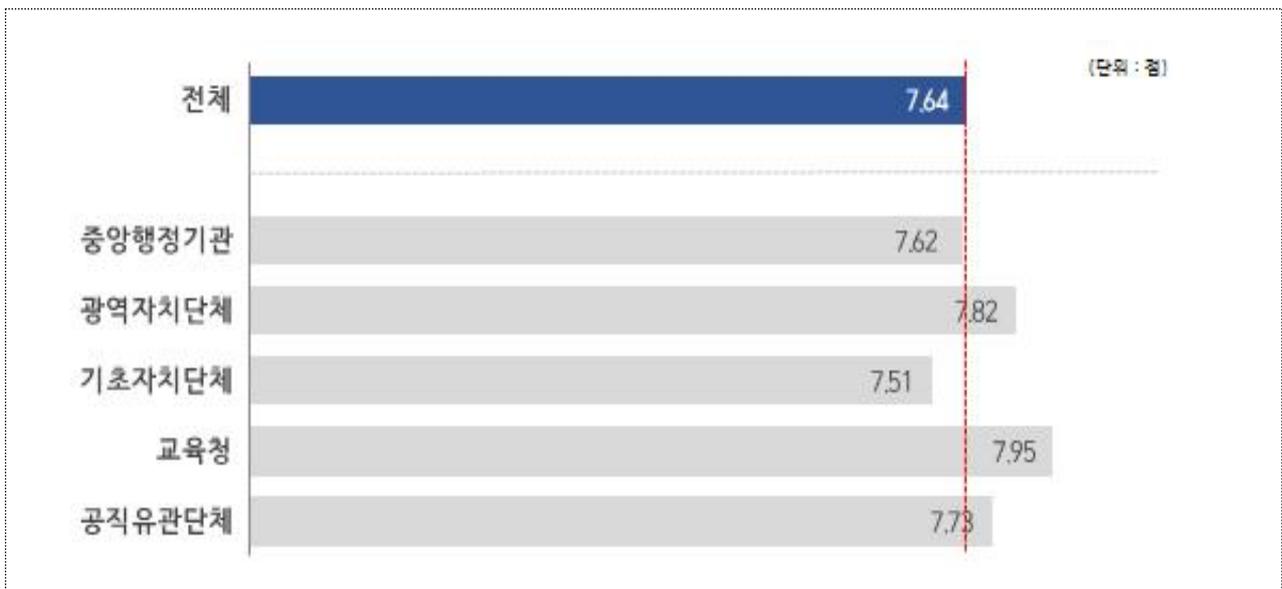
-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평균 7.64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08점 하락

< 내부청렴도 점수 비교('18년~'1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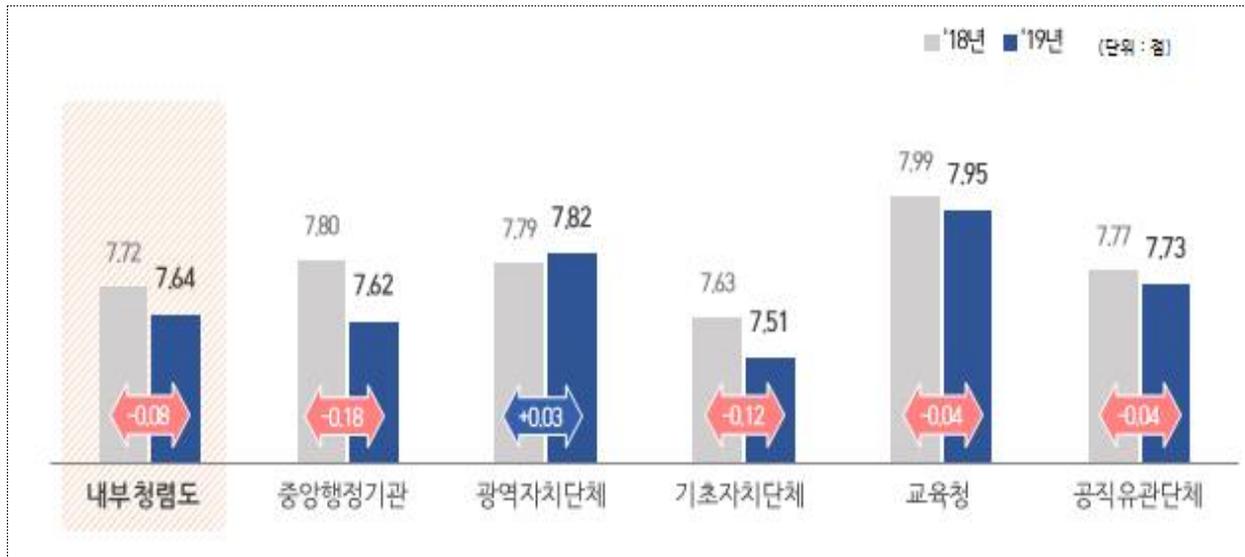
-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7.95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7.51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 유형별 내부청렴도 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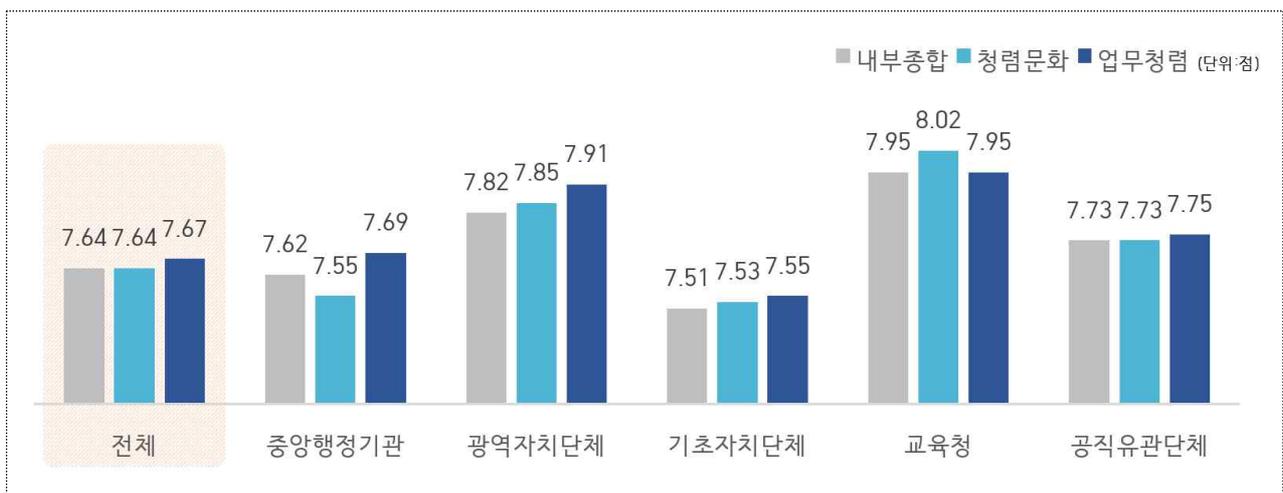
-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3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내부청렴도 평균 점수가 하락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세부 영역별로는 청렴문화와 업무청렴 영역 점수 모두 교육청이 가장 높음

< 내부청렴도 기관유형별 측정영역 점수비교 >



② 청렴문화 영역 분석

□ 조직문화 및 부패통제제도에 대해 평가하는 **청렴문화 영역**(7.64점)은 전년(7.63점) 대비 0.01점 **상승**

- 업무처리의 투명성,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은 **상승**했으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부패통제제도**에 대한 인식 점수 **하락**

< 청렴문화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조직문화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상승**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패행위 관행화(금품 등 수수)' 관련 인식으로 **소폭 상승**
- '특혜 제공' 관련 인식은 전년 대비 가장 큰 상승폭(+0.47점)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공직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항목임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조직문화 (점)		투명성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정보의 사적이용		부패행위 관행화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09	8.19	8.03	8.08	8.28	8.34	7.06	7.53	7.99	8.04	8.48	8.45	8.68	8.69
중앙행정기관	8.11	8.15	8.00	7.94	8.38	8.39	7.13	7.47	7.95	7.98	8.46	8.40	8.71	8.67
광역자치단체	8.28	8.41	8.16	8.28	8.54	8.57	7.17	7.70	8.15	8.26	8.75	8.68	8.87	8.91
기초자치단체	7.99	8.11	8.09	8.14	8.13	8.17	6.73	7.36	7.92	7.98	8.45	8.39	8.59	8.58
교육청	8.50	8.65	8.34	8.44	8.70	8.82	7.58	8.13	8.33	8.43	8.91	8.90	9.11	9.17
공직유관단체	8.14	8.24	7.94	8.01	8.36	8.44	7.32	7.65	8.03	8.08	8.46	8.46	8.71	8.74

□ 부패통제 제도 영역은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점수 하락

-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관련 인식의 하락폭(-0.15점)이 가장 컸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금지제도 운영의 실효성'으로 교육청의 점수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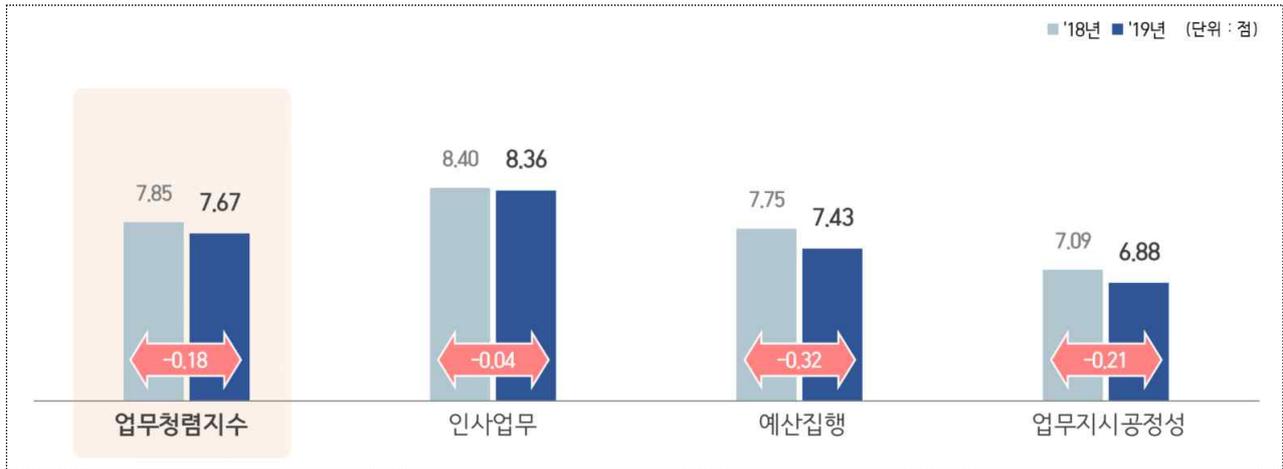
< 기관유형별 부패통제 제도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방지제도 (점)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정청탁방지 제도 운영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6.84	6.71	6.17	6.03	6.83	6.68	7.57	7.48
중앙행정기관	6.74	6.53	5.98	5.76	6.80	6.56	7.50	7.32
광역자치단체	6.99	6.89	6.28	6.19	7.05	6.94	7.68	7.60
기초자치단체	6.75	6.54	6.10	5.86	6.80	6.58	7.39	7.23
교육청	7.05	6.94	6.23	6.09	7.00	6.86	8.02	7.96
공직유관단체	6.92	6.87	6.27	6.22	6.83	6.76	7.73	7.72

③ 업무청렴 영역 분석

□ 조직 내부 주요 업무인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관련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업무청렴 영역(7.67점)은 전년(7.85점) 대비 0.18점 하락

< 업무청렴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인사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 평균점수가 하락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상승

< 기관유형별 인사 업무 관련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인사업무(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8.40	8.36	8.78	8.65	7.42	7.46	0.5	0.6
중앙행정기관	8.68	8.41	9.05	8.66	7.73	7.64	0.2	0.6
광역자치단체	8.02	8.51	8.28	8.87	7.37	7.43	0.6	0.4
기초자치단체	8.12	8.13	8.56	8.49	7.00	7.02	0.7	0.8
교육청	8.44	8.44	8.62	8.55	7.97	8.11	0.4	0.6
공직유관단체	8.63	8.56	8.98	8.80	7.74	7.82	0.3	0.4

○ 예산집행 관련 항목은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

< 기관유형별 예산 집행 관련 항목별 현황('18~'19년) >

구 분	예산집행(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예산 위법부당집행 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75	7.43	7.59	7.20	8.06	8.03	5.1	6.3
중앙행정기관	7.82	7.51	7.69	7.32	8.08	8.00	4.6	6.0
광역자치단체	7.97	7.72	7.79	7.47	8.33	8.36	4.0	4.4
기초자치단체	7.76	7.32	7.65	7.09	7.98	7.93	5.3	7.2
교육청	8.22	7.91	8.13	7.69	8.41	8.48	3.0	4.0
공직유관단체	7.67	7.47	7.46	7.24	8.09	8.07	5.8	6.1

○ 부당(불공정)한 업무지시 관련 항목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점수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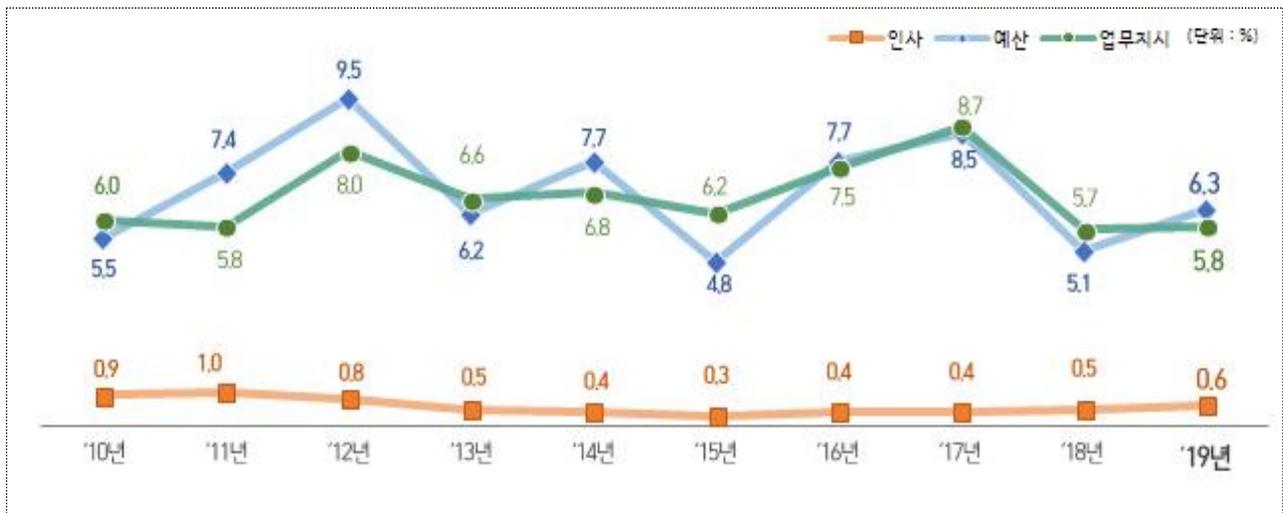
< 기관유형별 업무지시 공정성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업무지시 공정성(점)		부패경험(점)		부패인식(점)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률(%)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09	6.88	6.64	6.41	7.90	7.99	5.7	5.8
중앙행정기관	7.04	6.76	6.57	6.25	7.89	7.97	5.9	5.9
광역자치단체	7.44	7.20	7.00	6.75	8.22	8.27	4.0	4.2
기초자치단체	7.13	6.91	6.74	6.49	7.83	7.90	6.2	6.1
교육청	7.50	7.20	6.98	6.63	8.42	8.56	4.9	5.2
공직유관단체	7.01	6.82	6.51	6.32	7.90	8.03	5.6	5.7

□ 업무청렴 영역의 부패경험률을 세부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인사업무에서의 금품·향응·편의 경험률은 0.6%(+0.1%p), 예산(업무 추진비·운영비·여비·수당, 사업비)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은 6.3%(+1.2%p)
 - 공정성을 저해하는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경험률은 5.8%(+0.1%p)

< 내부청렴도 부패 경험률 추이('10년~'19년) >



※ '17년까지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부패경험률은 제공 경험률이며, '18년부터는 요구받거나 제공한 경험률을 표기

< 기관유형별 부패 경험 빈도 및 규모 >

기관 유형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경험				예산집행 관련 경험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 (회)	총 규모 (만원)	평균 빈도 (회)	평균 규모 (만원)	총 빈도(회)	평균 빈도 (회)
전체	711	17,659.5	2.13	52.87	37,214	6,563,389	9.78	1724.94	25,070.5	7.16
중앙행정기관	69.5	1,413	2.24	45.58	3,067	399,140	9.64	1255.16	2,681.5	8.65
광역자치단체	20	127.5	1.43	9.11	1,687.5	235,728.5	11.03	1540.71	1,084.5	7.33
기초자치단체	363.5	10,309	2.01	56.96	16,727	2,799,310	9.71	1624.67	8,583.5	5.86
교육청	41	1,358	1.58	52.23	1,630	122,795.5	8.67	653.17	1,519	6.20
공직유관단체	217	4,452	2.65	54.29	14,102.5	3,006,415	9.91	2112.73	11,202	8.39

④ 응답자별 응답경향 분석⁶⁾

- 근무 연수가 길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 내부의 청렴수준에 대해 양호하다고 인식
 - 내부청렴도 인식 항목 전반에 걸쳐 근무 연수와 직급 관련 응답 경향이 동일하게 나타남
 - 근무 연수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청렴 영역에서는 업무지시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직급별로 보면 청렴문화 영역에서는 부패통제 제도 운영, 업무청렴 영역에서는 인사업무 인식 부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큼
 - 근무 연수가 짧고 직급이 낮을수록 조직의 청렴수준과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젊은 세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정책 및 교육 등이 추진될 필요

< 응답자별 내부청렴도 부패인식 관련 응답경향 >

구 분		내부 청렴도(점)	청렴문화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도	업무청렴 (인식)	인사업무 인식	예산집행 인식	업무지시 공정성 인식
근 무 연 수	10년 이하	7.40	7.23	7.89	6.09	7.52	7.25	7.76	7.65
	11~20년	7.88	7.82	8.34	6.94	7.92	7.56	8.18	8.18
	21~30년	8.21	8.25	8.67	7.55	8.18	7.75	8.44	8.54
	31년 이상	8.31	8.39	8.75	7.78	8.24	7.79	8.46	8.68
직 급 ⁷⁾	관리직	8.44	8.44	8.77	7.87	8.44	8.23	8.47	8.72
	중간직	7.98	8.04	8.47	7.30	7.94	7.47	8.25	8.29
	하위직	7.59	7.50	8.15	6.40	7.65	7.15	8.04	7.95
	기타 ⁸⁾	7.14	6.97	7.71	5.70	7.27	6.94	7.47	7.54

6)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로 산정한 평균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므로 응답자별 전체 평균점수의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임

7)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8) 공무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4. 정책고객평가

-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정책관련자가 정책 등 업무전반에 대해 평가한 설문조사 결과로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영역으로 구성(총 11개 항목)
- 설문 대상자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고객평가는 중앙 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I, II 유형(정원 1,000명 이상 기관)에 한해 적용

< 정책고객평가 세부측정항목 >

세부항목(가중치)		점수	전년대비
정책고객평가 점수		7.45	-0.16
부패 인식 (0.419)	예산낭비 (0.130)	7.52	+0.31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0.184)	8.44	+0.21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0.189) ⁹⁾	7.94	+0.09
	정책 및 정보 공개 (0.094)	7.66	+0.41
	우월적 지위·권한남용 및 부당한 요구처분 (갑질 관행) (0.167)	8.20	+0.16
	퇴직공직자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0.123)	8.01	+0.53
	직무관련정보의 사적 이용 및 제3자 제공 (0.113)	8.30	+0.20
부패 통제 (0.298)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0.374)	7.34	+0.07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0.306)	7.11	+0.10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0.320)	7.93	+0.11
부패 경험 (0.283)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1.000)	6.58	-1.13

※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은 전문가·업무관계자(0.744) 점수와 주민 또는 학부모(0.256) 점수를 가중합산(광역자치단체는 주민, 교육청은 학부모 평가 적용)

9)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여부'와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문항이 '연고관계 등으로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문항으로 통합됨

① 전반적 측정 결과

□ 전문가·정책관련자¹⁰⁾(지역주민, 학부모 등 포함)가 평가한 정책고객 평가는 7.45점으로 전년(7.61점) 대비 하락

- 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부패방지 제도 등을 평가하는 부패통제 영역은 상승한 반면, 금품·향응·편의 수수에 대한 간접 경험을 반영한 부패경험 영역은 하락

< 정책고객평가 및 하위 부문 점수 비교('18년~'19년) >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7.91점)의 점수가 가장 높고, 교육청(6.65점)의 점수가 가장 낮음

< 기관유형별 정책고객평가 현황 >



10) 학계, 출입기자, 상급기관 감사·평가담당자,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 점수가 소폭 상승한 광역자치단체(+0.05점)를 제외한 대부분 유형의 기관은 정책고객평가 평균 점수가 하락
 -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점수가 상승했으나, 여전히 타 기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은 편

< 기관유형별 내부청렴도 개선도('18년~'19년) >



-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인식, 부패통제 영역에서 점수가 높은 반면, 부패경험 영역은 중앙행정기관이 다소 높은 수준

< 기관유형별 평가항목 점수 >

기관유형	정책고객평가	부패 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전체	7.45	8.04	7.46	6.58
중앙행정기관	7.43	7.93	7.24	<u>6.90</u>
광역자치단체	6.72	<u>7.32</u>	<u>6.67</u>	5.89
교육청	<u>6.65</u>	7.35	6.72	<u>5.53</u>
공직유관단체	<u>7.91</u>	<u>8.53</u>	<u>8.06</u>	6.83

② 부패인식 및 부패통제 영역 분석

□ 부패인식 영역은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

- 항목별로도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부정청탁' 관련 인식이며 예산낭비 및 정보공개 관련 인식은 상대적으로 취약

< 기관유형별 조직문화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인식 (점)		예산낭비		부정청탁		특혜제공		정보공개		갑질 관행		퇴직자 영향력		직무정보 사적이용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71	8.04	7.21	7.52	8.23	8.44	7.85	7.94	7.25	7.66	8.04	8.20	7.48	8.01	8.10
중앙행정	7.51	7.93	7.14	7.52	8.08	8.42	7.72	7.94	6.92	7.43	7.75	7.93	7.10	7.74	7.91	8.23
광역지자체	6.95	7.32	6.05	6.47	7.54	7.77	7.10	7.15	6.73	6.96	7.56	7.69	6.78	7.33	7.40	7.59
교육청	7.47	7.35	6.83	6.72	8.14	7.79	7.55	7.01	7.20	7.20	7.87	7.60	7.39	7.45	7.82	7.59
공직유관	8.16	8.53	7.72	8.06	8.58	8.83	8.25	8.42	7.67	8.17	8.45	8.71	7.99	8.57	8.53	8.77

□ 부패통제 영역도 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크게 상승

- 전년에 이어 올해도 '부패행위·공익 신고자 보호 실효성' 인식이 모든 유형에서 가장 취약
- 부패예방 등을 위한 노력에 대한 인식 항목 점수가 가장 크게 상승(+0.11점)

< 기관유형별 부패통제 제도 항목별 현황('18년~'19년) >

구 분	부패통제(점)		신고자 보호 실효성		적발·처벌의 적절성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 노력	
	'18	'19	'18	'19	'18	'19	'18	'19
전체기관	7.37	7.46	7.01	7.11	7.27	7.34	7.82	7.93
중앙행정기관	7.15	7.24	6.81	6.90	7.09	7.17	7.53	7.64
광역자치단체	6.58	6.67	6.19	6.28	6.30	6.47	7.29	7.29
교육청	7.04	6.72	6.68	6.25	6.79	6.52	7.68	7.42
공직유관단체	7.86	8.06	7.51	7.76	7.82	7.95	8.24	8.49

② 부패경험 항목 분석

□ 전문가·정책관련자 등 정책고객이 평가한 부패 간접경험률¹¹⁾은 **2.3%(+0.2%p)**

○ 기관 유형별로 보면 부패경험률은 교육청(4.8%), 광역자치단체(2.4%), 공직유관단체(2.2%), 중앙행정기관(1.7%) 순

< 정책고객별 부패경험률 현황 >

기관유형	전체(%)	전문가/업무관계자(%)	지역민/학부모(%)
전체	2.3	1.8	5.6
중앙행정기관	1.7	1.7	-
광역자치단체	2.4	1.7	6.1
교육청	4.8	3.7	5.0
공직유관단체	2.2	2.2	-

11) 공직자가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받은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

5.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① 행정기관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행정기관의 경우 소속 직원의 부패 관련 징계와 정무직의 주요 부패 사건을 종합¹²⁾하여 기관별 지수 도출
 - 부패행위자의 직위, 부패금액, 정원 등을 고려한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 올해부터 3년 이내('17년~'19년) 발생한 사건은 가중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감경하여 차등 반영
- 행정기관의 감점 적용대상 부패사건은 총 116개 기관 288건
 - 전체 행정기관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은 38.0%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5건, 평균 감점은 0.20점
 - 감점대상 부패행위의 총 부패금액¹³⁾은 31억 3,889만원으로, 감점 발생 기관당 평균 부패금액은 2,706만원

12)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 부패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13)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이 확인 가능한 사건 243건 기준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중앙행정기관(0.24점), 기초자치단체(0.20점), 광역자치단체(0.19점), 교육청(0.11점) 순
-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광역자치단체가 58.8%로 가장 높고, 다음 교육청(52.9%), 중앙행정기관(48.9%), 기초자치단체(33.2%) 순
-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중앙행정기관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시도교육청(3.7건), 광역자치단체(3.6건), 기초자치단체(1.8건) 순

< 행정기관 유형별 부패사건지수 감점 현황 >

기관유형	측정대상 기관(A)	감점적용 기관(B)	전체발생 건수(C)	발생률 (B/A)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건수(C/B)	감점적용기관 당 평균 감점
전 체	305	116	288	38.0	2.5	0.20
중앙행정기관	45	22	84	48.9	3.8	0.24
광역자치단체	17	10	36	58.8	3.6	0.19
기초자치단체	226	75	135	33.2	1.8	0.20
교육청	17	9	33	52.9	3.7	0.11

- 감점적용 기관당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5,235만원), 교육청(3,525만원), 광역자치단체(2,296만원), 기초자치단체(1,921만원) 순
- 부패행위자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1,090만원
 - 1인당 평균 부패금액은 중앙행정기관(1,371만원)이 가장 높고, 기초자치단체(1,067만원), 교육청(961만원), 광역자치단체(638만원) 순

< 감점대상 사건 기관별·행위자별 부패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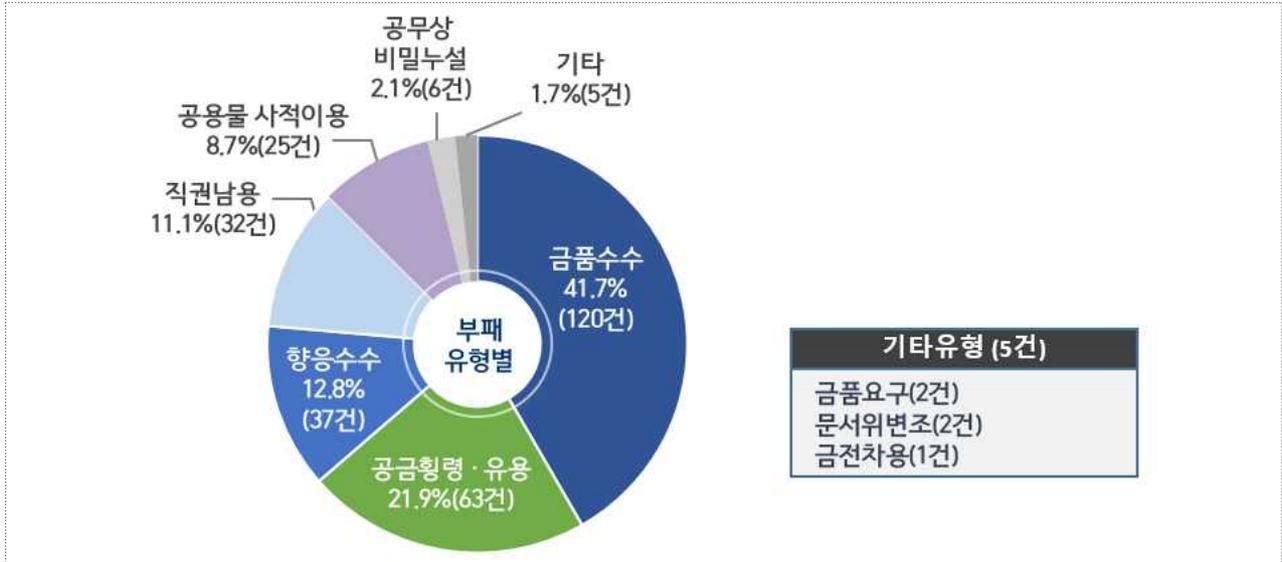
(금액: 만원)

기관유형	총 금액	감점대상 기관수	기관당 부패금액	행위자 수	1인당 부패금액
전 체	313,889	116	2,706	288	1,090
중앙행정기관	115,172	22	5,235	84	1,371
광역자치단체	22,956	10	2,296	36	638
기초자치단체	144,040	75	1,921	135	1,067
교육청	31,722	9	3,525	33	961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41.7%, 120건), 공금횡령·유용(21.9%, 63건), 향응수수(12.8%, 37건), 직권남용(11.1%, 32건), 공용물 사적이용(8.7%, 25건), 공무상 비밀누설(2.1%, 6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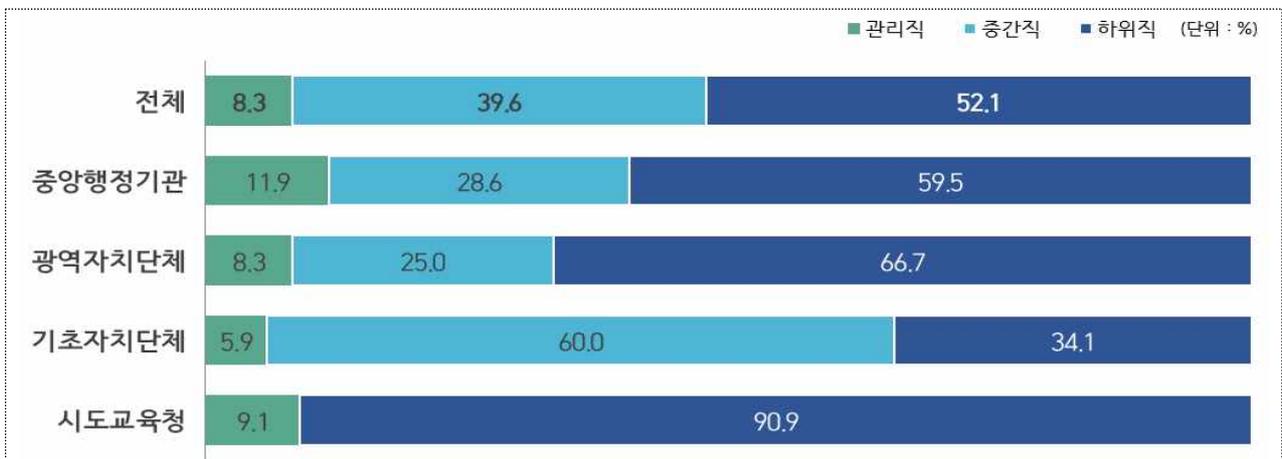
< 부패유형별 현황 >



- 부패유형별 금액은 금품수수가 총 17억 7,724만원으로 전체 부패 금액의 56.6%를 차지, 1인당 금품수수액은 평균 1,493만원

- 부패행위자 중 직위의 비율은 하위직(150건, 52.1%)이 중간직(114건, 39.6%)보다 다소 많음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 관리직(41.7%)과 중간직(57.0%)은 금품수수 비율이 가장 높고, 하위직은 공금 횡령·유용(32.0%)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직위별 부패유형 >

(비율: %)

직위유형	합계 (%)	금품수수	공금 횡령유용	향응수수	직권남용	공용물 사적이용	공무상 비밀누설	기타
전 체	100	41.7	21.9	12.8	11.1	8.7	2.1	1.7
관리직	100	41.7	4.2	16.7	25.0	4.2	4.2	4.2
중간직	100	57.0	11.4	14.9	13.2	2.6	0.9	-
하위직	100	30.0	32.7	10.7	7.3	14.0	2.7	2.7

② 공직유관단체 부패사건지수

< 개요 및 현황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사건은 부패사건 DB를 바탕으로 정량평가와 전문가 정성평가¹⁴⁾에 의해 점수 산정¹⁵⁾
- 부패사건 DB는 감사자료, 언론기사 및 수사기관 보도자료, 징계 자료 등을 근거로 구성
- 정량평가('19년~)는 기관정원, 부패금액, 부패사건 발생시점 등을 반영하여 산식에 의해 점수 산정

14) 반부패·행정·법학 등 15명의 전문가 평가단 구성, 부패금액 및 내용, 관행화·조직화 정도, 부정적 파급력을 평가

15) 기관의 자율적 적발·처벌 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자체적발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

□ 부패사건지수 적용 대상 부패사건은 총 30개 기관 88건

- 전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패사건 감점 대상기관 비율은 13.0%
- 감점 적용 기관당 평균 사건 수는 2.9건, 감점은 0.29점, 연루자 수는 2.9명
- 감점대상 사건의 총 부패금액¹⁶⁾은 7억 1,854만원이며, 사건발생 기관 당 평균 부패금액은 2,395만원

< 기관유형별 분석 >

- 기관유형별 감점 적용 부패사건 발생률은 공직유관단체 I 유형이 38.1%로 가장 높음
- 감점 적용 기관 유형별 평균 감점은 공직유관단체 III유형(0.38점), IV유형(0.36점), 연구원(0.30점), I 유형(0.29점), II 유형(0.24점) 순

< 기관유형별 감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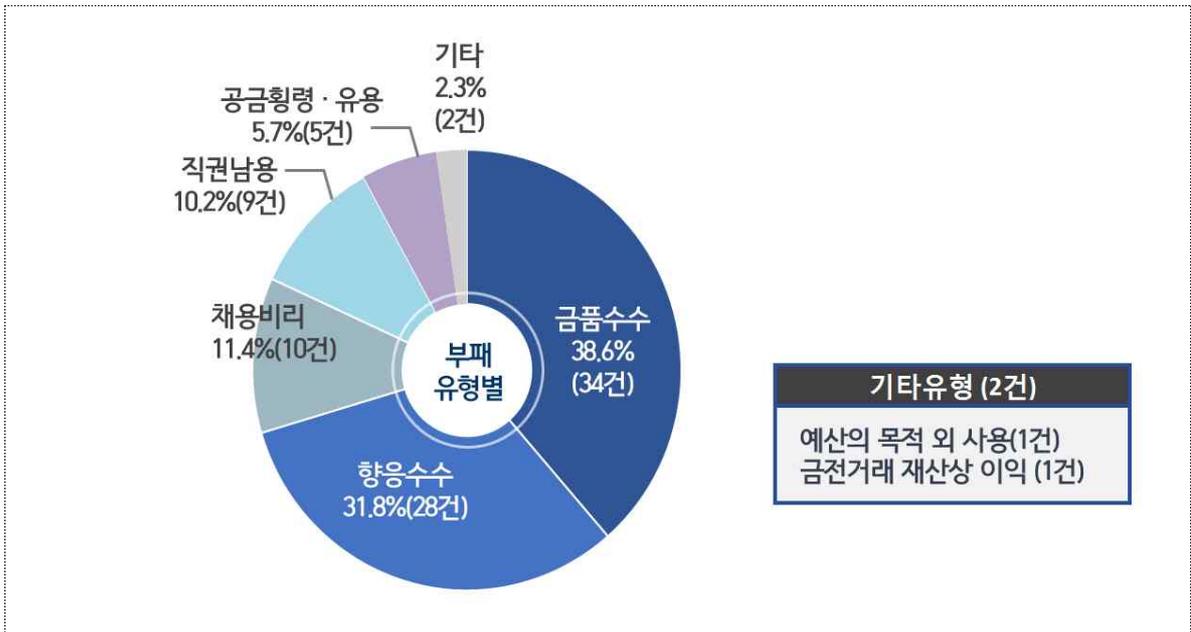
구분		전체	I 유형	II유형	III유형	IV유형	V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 등
감점 기관	측정 대상 기관 수	230	21	38	43	41	15	25	47
	감점 발생 기관 수	30	8	6	4	3	-	5	4
	발생률(%)	13.0	38.1	15.8	9.3	7.3	-	20.0	8.5
감점 사건	전체 건수	88	49	13	6	7	-	7	6
	감점기관당 평균건수	2.9	6.1	2.2	1.5	2.3	-	1.4	1.5
감점	전체기관 평균 감점	0.04	0.11	0.04	0.04	0.03	-	0.06	0.02
	감점기관 평균 감점	0.29	0.29	0.24	0.38	0.36	-	0.30	0.23

16)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금액을 수반한 사건 기준

< 부패행위 내용 및 행위자 >

- 부패유형별 발생률은 금품수수(38.6%, 34건), 향응수수(31.8%, 28건), 채용비리(11.4%, 10건), 직권남용(10.2%, 9건) 순으로 나타남

< 부패유형별 현황 >



-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행위자 직급 비중은 중간직, 관리직, 하위직 순으로 행정기관에 비해 관리직의 부패행위 비중이 큰 편임

< 부패행위자 직위별 현황 >



Ⅲ 이슈별 분석

① “공정” 관련 항목 분석

- ▶ 측정항목 중 “공정”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특혜 제공”과 “부정청탁” 관련 인식 항목을 세대·직급 등 다각도로 분석

< 측정대상 및 기관유형별 분석 >

□ 업무처리시 ‘공정’ 관련 인식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

- 공통적으로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 전문가·정책관련자 > 공직자 순
-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업무처리가 상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식

< 기관유형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공정항목 종합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중앙행정기관	8.89	8.92	7.13	7.47	7.72	7.94	9.00	8.97	8.38	8.39	8.08	8.42	8.49	8.58
광역자치단체	8.89	8.90	7.17	7.70	7.10	7.15	8.97	8.96	8.54	8.57	7.54	7.77	8.42	8.51
기초자치단체	8.50	8.65	6.73	7.36	-	-	8.63	8.74	8.13	8.17	-	-	8.27	8.45
교육청	8.84	8.83	7.58	8.13	7.55	7.01	9.01	8.96	8.70	8.82	8.14	7.79	8.57	8.57
공직유관단체	9.20	9.25	7.32	7.65	8.25	8.42	9.31	9.33	8.36	8.44	8.58	8.83	8.85	8.94
전체	8.86	8.94	7.06	7.53	7.85	7.94	8.98	9.03	8.28	8.34	8.23	8.44	8.55	8.68

< 응답자 특성별 분석¹⁷⁾ >

-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이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 50대 이상과 2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업무처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30대와 40대는 점수가 높음
 -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경험이 누적된 중·장년층과 신규로 업무처리를 경험하는 20대 청년층의 부패 관련 인식이 보다 엄격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세대에서 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

< 세대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외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20대 이하	8.82	8.90	8.91	8.95
30대	9.00	9.08	9.11	9.13
40대	8.95	9.04	9.04	9.09
50대	8.69	8.80	8.86	8.93
60대 이상	8.47	8.51	8.57	8.66
전체	8.82	8.90	8.93	8.99

-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평가한 공정성 정도를 근무 연수와 직급별로 살펴보면,
 - 근무 연수별로는 오래 근무할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10년 이하 근무자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로 가장 불공정하게 인식

17) 청렴도 점수는 기관별로 산정하므로 응답자별로 산정한 평균점수와 차이가 있으며, 응답자는 소속기관에 대해서만 평가한 것이므로 응답자별 전체 평균점수의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일반적인 응답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임

- 전년과 비교해 보면 모든 구간에서 공직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10년 이하 근무자들이 느끼는 '특혜 제공'에 대한 인식이 보다 크게 개선되었음

< 근무 연수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10년 이하	6.68	<u>7.21</u>	8.02	<u>8.07</u>
11년~20년	7.20	<u>7.69</u>	8.38	<u>8.47</u>
21년~30년	7.51	<u>8.00</u>	8.69	<u>8.78</u>
31년 이상	7.69	<u>8.15</u>	8.77	<u>8.85</u>
전체	7.11	7.57	8.34	8.38

- 직급별¹⁸⁾로는 전반적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인식하였고,
 - 하위직과 기타는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점수

< 직급별 공정 관련 인식 항목 점수(행정기관 내부청렴도) >

구 분	업무처리시 특정인에게 특혜제공(점)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점)	
	'18	'19	'18	'19
관리직	7.74	<u>8.25</u>	8.66	<u>8.78</u>
중간직	7.44	<u>7.78</u>	8.48	<u>8.53</u>
하위직	7.00	<u>7.39</u>	8.37	<u>8.28</u>
기타 ¹⁹⁾	6.69	<u>7.07</u>	8.03	<u>7.90</u>
전체	7.08	7.50	8.35	8.32

18) 직급별 분류가 용이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을 대상으로 분석함

19) 공무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등

② “생활적폐” 과제²⁰⁾ 관련 분석

▶ 채용비리, 갑질관행, 안전분야 등 생활적폐 과제 관련 분석

<채용비리 관련 분석 >

□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²¹⁾의 청렴도 결과를 보면,

- 내부청렴도 점수가 지속적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인사업무 영역의 점수가 크게 낮음
- 다만, 기관장 노력도²²⁾, 부패방지 제도 운영 관련 점수는 올해 공직 유관단체 평균보다 높으며, 인사업무 영역이나 내부청렴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격차가 감소
 - 이는 작년 하반기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실시로 당해에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기관은 기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채용비리 연루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결과 >

분류	'19년 기관수 (개)	내부 청렴도(점)		인사업무 영역(점)		기관장 노력도		부패방지제도			
								신고자보호 실효성		적발처벌 적절성	
		'18	'19	'18	'19	'18	'19	'18	'19	'18	'19
공직유관단체 전체	230	7.77	7.73	7.74	7.82	7.97	7.82	6.27	6.22	6.83	6.76
채용비리 연루기관	39	7.48	7.72	7.24	7.72	7.65	7.93	5.82	7.69	6.36	6.79
차 이		-0.29	-0.01	-0.50	-0.10	-0.32	+0.11	-0.45	+1.47	-0.47	+0.03

20)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 등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과제로
 ①유치원·학사 비리, ②**채용비리**, ③**갑질관행**, ④보조금 부정수급, ⑤지역 토착비리, ⑥재건축·재개발 비리, ⑦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⑧**안전분야 부패**, ⑨탈세관행 개혁 9개 과제 선정
 이 중, 청렴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에 포함되어 분석이 가능한 과제 3개에 대해 분석 실시

21)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 중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19.2.) 및 감사원 감사('19.9.)를 통해 채용비리 혐의가 인정된 기관

22) 내부청렴도 설문에 포함하여 측정하며, 측정결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

<갑질 관행 관련 분석 >

- 각 측정영역별 ‘갑질 관행’ 인식 관련 점수를 조사 대상에 따라 기관유형별로 보면,
- 공직유관단체와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은 갑질 관행에 대해 양호하다고 평가
- 외부 업무관계자와 업무 처리시 갑질 관행에 대한 공직자 스스로의 평가에서는 교육청의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
-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는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양호하게 평가한 반면,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 조사대상별 ‘갑질 관행’ 관련 인식 점수 >

구 분	갑질 관행 인식(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18	'19	'18	'19	'18	'19
중앙행정기관	8.81	8.74	7.95	7.98	7.75	7.93
광역자치단체	8.84	8.81	8.15	8.26	7.56	7.69
기초자치단체	8.68	8.79	7.92	7.98	-	-
교육청	8.81	8.81	8.33	8.43	7.87	7.60
공직유관단체	9.23	9.27	8.03	8.08	8.45	8.71
전체	8.94	8.99	7.99	8.04	8.04	8.20

< 안전 분야 업무 관련 분석 >

-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유관단체 230개를 서비스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한 결과,
 - 28개 공공안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평균은 8.41점(+0.02점), 외부청렴도 평균은 8.71점(+0.04점)으로 전년²³⁾에 비해 개선
 - 부패인식 항목은 9.18점으로 전체 평균(9.13점)보다 높은 수준인데 비해, 부패경험 항목은 8.50점으로 전체 평균(8.60점)보다 낮은 수준

< 공공서비스 유형별 공직유관단체 외부청렴도 항목 점수 >

업무유형	전체	에너지	금융	고용·복지	교육·연구	산업	공공안전	SOC	문화
종합청렴도(점)	8.46	8.55	8.55	8.54	8.50	8.49	8.41	8.37	8.28
외부청렴도	8.75	8.91	8.87	8.91	8.82	8.80	8.71	8.56	8.54
부패인식	9.13	9.49	9.23	9.30	9.20	9.18	9.18	8.84	8.98
부패경험	8.60	8.57	8.74	8.73	8.69	8.69	8.50	8.50	8.41

23) '18년 평균(점) : 종합청렴도 8.39점, 외부청렴도 8.67점(부패인식 9.12점, 부패경험 8.42점)

IV 향후 추진계획

□ '19년 측정결과의 환류 제고

-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청렴지도를 제작하여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19.12월)
- 기관의 자율적 청렴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한 분석과 활용 확대('19.12월~'20.3월)
 - ※ 갑질·채용비리 관련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공정 정책 추진 및 맞춤형 청렴교육 등 청렴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청렴도 측정 하위 기관을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컨설팅 기관에 포함하여 청렴도 향상 노력 촉진·지원
- 청렴도 측정 결과의 기관별 홈페이지 공개 현황 점검('20.1월~3월)
 -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3에 따라 청렴도 결과 공개는 법적 의무사항

□ 측정의 신뢰도·타당도 제고

-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20년 측정대상 기관 및 업무 선정
 - 부패현황, 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신규 기관 및 측정 대상 업무 확정('20년 상반기)
- 그동안 지적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측정모형 개선 검토

붙임 4

기관유형별 청렴도 등급표

1-1. 중앙행정기관(I 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3)	외부청렴도(23)	내부청렴도(23)	정책고객 평가(23)
1 등급	통계청(-)	통계청(-)	국세청(-) 통계청(▲1등급)	관세청(▲1등급) 농촌진흥청(▲3등급)
2 등급	국가보훈처(-) 농촌진흥청(-) 환경부(▲1등급)	국방부(▲1등급)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외교부(-) 환경부(▲1등급)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1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토교통부(▲1등급) 통계청(▼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3 등급	검찰청(-) 경찰청(▲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관세청(-) 국방부(▲1등급) 국토교통부(▲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1등급) 법무부(▼1등급) 산림청(▼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검찰청(▲2등급) 경찰청(▲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가보훈처(▼1등급) 국토교통부(▲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1등급) 산림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1등급) 관세청(▼1등급)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환경부(-)	검찰청(▼1등급) 경찰청(▲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국가보훈처(▼1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1등급) 보건복지부(-) 산림청(▼1등급) 해양수산부(-) 환경부(-)
4 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보건복지부(-) 해양경찰청(▼1등급) 해양수산부(▼1등급)	고용노동부(▼1등급) 법무부(▼1등급) 보건복지부(▼1등급) 해양수산부(-)	국방부(▼1등급)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1등급) 보건복지부(-) 외교부(▲1등급) 행정안전부(▼1등급)	문화재청(▼2등급) 법무부(▼1등급) 외교부(-) 해양경찰청(▼1등급)
5 등급	국세청(-)	국세청(-) 해양경찰청(▼2등급)	산림청(▼2등급)	국방부(-) 국세청(▼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1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1-2. 중앙행정기관(II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22)	외부청렴도(22)	내부청렴도(22)	정책고객 평가(21)
1 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1등급)
2 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금융위원회(-) 법제처(▼1등급) 병무청(▲1등급) 새만금개발청(▼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조달청(▲1등급)	국무조정실(▲2등급) 금융위원회(-) 새만금개발청(▼1등급) 소방청(-) 인사혁신처(▲1등급) 통일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법제처(▼1등급) 병무청(-)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중소벤처기업부(▲2등급)	국무조정실(-) 법제처(-)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조달청(-) 특허청(▼1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등급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1등급) 여성가족부(▲1등급)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2등급)	기상청(▼1등급) 방송통신위원회(▲1등급) 법제처(▼1등급) 병무청(▲1등급)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1등급)	교육부(-) 국무조정실(▲1등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1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새만금개발청(▼1등급) 인사혁신처(-) 조달청(-) 조세심판원 특허청(-)	금융위원회(▲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소방청(-) 여성가족부(▲1등급)
4 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교육부(-) 기상청(▼1등급)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통일부(▼1등급)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교육부(-) 기획재정부(▼1등급) 특허청(▲1등급)	여성가족부(▲1등급) 통일부(▲1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교육부(▲1등급) 기상청(▼1등급)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1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1등급) 인사혁신처(▼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5 등급	조세심판원	방위사업청(▼1등급) 산업통상자원부(▼2등급) 조세심판원	기상청(▼1등급) 소방청(▼2등급)	-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2. 광역자치단체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1 내 관	-	-	경상남도(▲1등급)	경상남도(▲1등급)
2 내 관	경기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2등급) 전라북도(▲2등급) 충청남도(▲2등급) 충청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1등급)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2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울산광역시(-) 전라남도(▲2등급) 전라북도(▲3등급) 충청남도(▲3등급)	부산광역시(-) 전라북도(▲1등급) 충청북도(▲1등급)	경기도(-) 부산광역시(▲1등급) 전라남도(▲1등급) 충청남도(▼1등급)
3 내 관	경상남도(▼1등급)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인천광역시(-) 충청북도(▼1등급)	강원도(▼1등급) 경기도(▼1등급) 경상북도(▲2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1등급) 울산광역시(▲1등급)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1등급)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충청북도(▼1등급)
4 내 관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부산광역시(▼3등급)	강원도(▼1등급) 경상남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광주광역시(▼1등급) 부산광역시(▼3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3등급)	강원도(▼1등급) 세종특별자치시(▼1등급) 울산광역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5 내 관	광주광역시(▼2등급) 제주특별자치도(▼2등급)	제주특별자치도(▼2등급)	광주광역시(▼2등급) 대구광역시(▼2등급)	제주특별자치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1. 기초자치단체(시)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75)	외부청렴도(75)	내부청렴도(75)
1 등급	강원도 속초시(▲3등급) 경기도 화성시(▲1등급)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강원도 속초시(▲3등급)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경기도 광주시(▲2등급) 경기도 구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1등급) 경상북도 영천시(▲3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남도 보령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제천시(▲1등급)	강원도 강릉시(▲3등급)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기도 구리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동두천시(▲1등급)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2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1등급) 경상남도 진주시(▲1등급) 경상북도 경산시(▲1등급) 경상북도 문경시(▲3등급) 경상북도 영주시(▲2등급) 경상북도 영천시(▲3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북도 군산시(-) 충청남도 계룡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2등급) 충청북도 제천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2등급)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속초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수원시(▲1등급)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의왕시(▲1등급) 경기도 화성시(▲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영천시(▲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1등급)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순천시(▲2등급) 전라남도 여주시(-) 전라북도 전주시(▲1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2등급)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충주시(-)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남도 창원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구미시(▲2등급) 경상북도 문경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안동시(-)	강원도 원주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1등급) 강원도 태백시(▲1등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남도 창원시(▼1등급)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구미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삼척시(▼1등급) 강원도 춘천시(▲1등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2등급) 경기도 안양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2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남도 창원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통영시(▼1등급) 경상북도 구미시(▲2등급) 경상북도 문경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안동시(-)	강원도 강릉시(▲2등급) 강원도 춘천시(▼1등급) 강원도 태백시(▲1등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1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상남도 밀양시(▲1등급) 경상남도 창원시(▼1등급)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북도 구미시(▲2등급) 경상북도 상주시(▲1등급)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김제시(▲1등급)	강원도 강릉시(-) 강원도 삼척시(▼1등급) 강원도 춘천시(▲1등급) 경기도 고양시(▲1등급) 경기도 광주시(▲1등급)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시흥시(▲1등급) 경기도 안산시(▲2등급) 경기도 안양시(▼1등급) 경기도 여주시(▲1등급)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평택시(▲1등급)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2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안동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정읍시(-)

구 분	종합청렴도(75)	외부청렴도(75)	내부청렴도(75)
3 배 단	경상북도 영주시(▲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목포시(▲1등급)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1등급)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1등급)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북도 정읍시(▼1등급)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당진시(▼1등급) 충청남도 서산시(▼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1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충청북도 충주시(▲2등급)	충청남도 공주시(▼1등급) 충청남도 논산시(▼1등급) 충청남도 보령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4 배 단	강원도 삼척시(▼2등급) 강원도 태백시(-)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양주시(▲1등급) 경기도 파주시(▼2등급) 경기도 포천시(▼2등급) 경상남도 거제시(▼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2등급) 경상북도 김천시(▼1등급)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1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강원도 삼척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1등급) 경기도 안성시(▼1등급) 경기도 양주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상남도 거제시(▼1등급) 경상북도 김천시(▼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북도 남원시(▼1등급) 전라북도 익산시(▼1등급) 충청남도 논산시(▼2등급)	강원도 원주시(▼1등급) 강원도 태백시(▼1등급) 경기도 과천시(▼1등급)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2등급) 경기도 군포시(▼1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정부시(▲1등급) 경기도 파주시(▼1등급) 경기도 포천시(▼1등급) 경기도 하남시(▼1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문경시(▼1등급)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남원시(-)
5 배 단	강원도 동해시(▼3등급) 경기도 수원시(▼2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나주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2등급)	강원도 동해시(▼2등급) 경기도 수원시(▼2등급) 경상남도 김해시(▼3등급) 경상북도 경주시(-) 전라남도 나주시(▼1등급) 전라남도 순천시(▼2등급) 전라남도 여수시(▼1등급)	경기도 양주시(▼1등급)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군산시(▼1등급) 충청남도 계룡시(-)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2. 기초자치단체(군)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82)	외부청렴도(82)	내부청렴도(82)
1 배 타	전라남도 영광군(▲1등급)	-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창녕군(-) 전라북도 고창군(-)
2 배 타	강원도 양양군(▲1등급) 강원도 홍천군(▲1등급)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2등급)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의령군(▲2등급)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북도 고령군(▲1등급)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의성군(▲1등급)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2등급)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담양군(▲1등급) 전라남도 신안군(▲2등급)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고창군(▲1등급) 전라북도 무주군(▲1등급)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부여군(▲2등급) 충청남도 예산군(▼1등급) 충청북도 괴산군(▲1등급)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1등급)	강원도 고성군(▲1등급)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홍천군(▲1등급)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2등급)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함안군(▲1등급)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예천군(▲1등급) 경상북도 의성군(▲1등급) 경상북도 청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1등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담양군(▲1등급) 전라남도 신안군(▲2등급) 전라남도 영광군(▲1등급) 전라남도 함평군(▲1등급)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고창군(▲2등급) 전라북도 무주군(▲1등급)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진안군(▲2등급) 충청남도 예산군(▼1등급) 충청북도 괴산군(▲1등급)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도 홍천군(▲1등급) 경기도 연천군(-) 경상남도 고성군(▲1등급)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1등급) 경상남도 하동군(▼1등급)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북도 영양군(▲1등급)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청도군(▲1등급) 경상북도 철곡군(-) 전라남도 강진군(▲1등급) 전라남도 보성군(▲1등급) 전라남도 신안군(▲1등급) 전라남도 영광군(▼1등급) 전라남도 해남군(-) 전라북도 부안군(-)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태안군(-) 충청북도 보은군(▲1등급)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진천군(▲1등급)
3 배 타	강원도 고성군(▲2등급)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화천군(-) 경상남도 거창군(▼1등급) 경상남도 남해군(▲1등급) 경상북도 봉화군(▲2등급) 경상북도 성주군(▲1등급)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송군(-)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평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1등급) 경상남도 의령군(▲1등급) 경상북도 봉화군(▲2등급) 경상북도 성주군(▲1등급)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철곡군(▼1등급)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인제군(▼1등급) 강원도 철원군(▲1등급)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횡성군(▲1등급) 경상남도 거창군(▼1등급) 경상남도 함안군(▼1등급) 경상남도 합천군(▲1등급) 경상북도 고령군(▲1등급)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1등급)

구 분	종합청렴도(82)	외부청렴도(82)	내부청렴도(82)
3 년 간	경상북도 칠곡군(▼1등급) 울산광역시 울주군(▼1등급) 인천광역시 강화군(▼1등급)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보성군(▲1등급) 전라남도 영암군(▲1등급) 전라남도 완도군(▲2등급)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북도 부안군(▼1등급)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임실군(▼1등급) 전라북도 장수군(▼1등급) 전라북도 진안군(▲1등급) 충청남도 서천군(▼1등급)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영동군(▼1등급) 충청북도 증평군(▼1등급)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보성군(▲1등급) 전라남도 영암군(▲1등급) 전라남도 완도군(▲1등급) 전라북도 부안군(▼1등급) 전라북도 완주군(▲1등급) 전라북도 임실군(▼1등급) 충청남도 부여군(▲1등급) 충청남도 서천군(▼1등급)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북도 증평군(▼1등급)	경상북도 울진군(▼1등급) 경상북도 의성군(▼1등급) 경상북도 청송군(-) 대구광역시 달성군(▲1등급) 인천광역시 옹진군(▲1등급) 전라남도 곡성군(▲1등급) 전라남도 담양군(▼1등급) 전라남도 무안군(▼1등급)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함평군(▲1등급)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완주군(▼1등급) 전라북도 진안군(-)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천군(▲1등급)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1등급)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단양군(▼1등급)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증평군(▼1등급)
4 년 간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철원군(▼1등급)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하동군(▼1등급) 경상남도 함양군(▲1등급)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장성군(▼1등급) 전라남도 화순군(▼1등급) 충청남도 청양군(▼2등급) 충청남도 태안군(▼2등급) 충청북도 진천군(-)	강원도 영월군(▼1등급) 강원도 정선군(▼2등급)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하동군(▼1등급)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전라남도 구례군(▲1등급) 전라남도 무안군(▲1등급) 전라남도 장성군(▼1등급) 전라남도 장흥군(▲1등급) 전라남도 진도군(▼1등급) 충청남도 청양군(▼2등급) 충청북도 진천군(-)	강원도 고성군(▲1등급)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정선군(▼1등급) 경기도 양평군(▼1등급) 경상북도 봉화군(▼1등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천광역시 강화군(▼1등급) 전라남도 구례군(▼1등급)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진도군(▲1등급) 전라북도 임실군(▼1등급)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남도 금산군(▼1등급)
5 년 간	강원도 정선군(▼3등급)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3등급) 경상북도 군위군(▼3등급) 경상북도 영덕군(▼1등급)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진도군(▼2등급) 충청남도 금산군(▼1등급)	강원도 철원군(▼3등급)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3등급)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1등급) 경상북도 군위군(▼3등급) 경상북도 영덕군(▼1등급)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화순군(▼2등급) 충청남도 금산군(▼1등급) 충청남도 태안군(▼3등급)	강원도 화천군(-) 경기도 가평군(▼1등급) 경상북도 영덕군(▼1등급) 경상북도 울릉군(▼1등급)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흥군(-)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3-3. 기초자치단체(구)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번	종합청렴도(69)	외부청렴도(69)	내부청렴도(69)
1 내 과	부산광역시 북구(▲2등급)	-	-
2 내 과	광주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남구(▲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3등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등급) 부산광역시 수영구(▲1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3등급) 서울특별시 마포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3등급) 광주광역시 북구(▲1등급)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중구(▲2등급) 대전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2등급) 부산광역시 북구(▲2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2등급)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2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3등급) 서울특별시 마포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송파구(▲1등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울산광역시 남구(▲2등급) 울산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동구(▲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1등급)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1등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부산광역시 금정구(▲1등급)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1등급)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1등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울산광역시 동구(▲1등급) 울산광역시 북구(▲1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1등급)
3 내 과	광주광역시 광산구(▲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동구(▼1등급) 대전광역시 유성구(▼1등급)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2등급) 부산광역시 동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1등급) 부산광역시 서구(▼1등급)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광진구(▲2등급) 서울특별시 구로구(▼1등급)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남구(-)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광역시 동구(▼1등급) 대전광역시 유성구(▼1등급) 대전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2등급)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1등급)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영도구(▲1등급) 부산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1등급) 대구광역시 중구(▼1등급)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중구(▼1등급) 부산광역시 강서구(▼1등급) 부산광역시 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상구(▲1등급) 부산광역시 사하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마포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 번	종합청렴도 (69)	외부청렴도 (69)	내부청렴도 (69)
3 단 위	서울특별시 금천구(▼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울특별시 중랑구(▼1등급) 울산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계양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중구(-)	서울특별시 성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성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울산광역시 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1등급)
4 단 위	광주광역시 남구(▼1등급) 대구광역시 서구(▼2등급) 부산광역시 금정구(▼1등급) 부산광역시 연제구(▼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등급) 서울특별시 종로구(▼2등급) 울산광역시 중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1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1등급) 인천광역시 중구(▼1등급)	광주광역시 남구(▼1등급) 부산광역시 금정구(▼1등급) 부산광역시 연제구(▼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특별시 구로구(▼2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등급) 울산광역시 중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1등급)	대전광역시 유성구(▼1등급) 부산광역시 서구(▼2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금천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1등급) 울산광역시 남구(▼1등급) 인천광역시 동구(▲1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5 단 위	서울특별시 서초구(▼3등급) 서울특별시 중구(▼2등급)	대구광역시 서구(▼3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3등급) 서울특별시 종로구(▼3등급) 서울특별시 중구(▼2등급)	광주광역시 남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서울특별시 중구(▼2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인천광역시 중구(▼1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4. 교육청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17)	외부청렴도(17)	내부청렴도(17)	정책고객 평가(17)
1 년 단 기	강원도 교육청(▲1등급)	-	-	-
2 년 단 기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강원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경상북도 교육청(▲2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2등급)
3 년 단 기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강원도 교육청(▼1등급)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2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2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경상남도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4 년 단 기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전라북도 교육청(▼2등급) 충청남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경기도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3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5 년 단 기	-	대전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북도 교육청(▼3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1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1. 공직유관단체(I 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번	종합청렴도(21)	외부청렴도(21)	내부청렴도(21)	정책고객 평가(21)
1 배 편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2등급)
2 배 편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1등급) 한전KPS(주)(▲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1등급) 국민연금공단(▲1등급) 근로복지공단(▲1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은행(▲1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1등급) 한전KPS(주)(▲1등급)	국민연금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3등급) 한전KPS(주)(▲1등급)
3 배 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중소기업은행(▲2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1등급)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소기업은행(▲2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마사회(▲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	강원랜드(▲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은행(▲1등급)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2등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1등급) 한전KPS(주)(-)	강원랜드(▲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근로복지공단(-)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4 배 편	강원랜드(▲1등급) 한국도로공사(▼2등급)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랜드(▼1등급) 한국도로공사(▼2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적십자사(▼1등급) 한국도로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산업은행(-)
5 배 편	대한적십자사(▼2등급)	대한적십자사(▼2등급) 한국수자원공사(▼1등급)	한국농어촌공사(▼2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대한적십자사(-) 중소기업은행(▼2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2. 공직유관단체(Π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38)	외부청렴도(38)	내부청렴도(38)	정책고객 평가(38)
1 년	한국중부발전(주)(▲1등급)	-	기술보증기금(▲1등급) 한국중부발전(주)(-)	-
2 년	기술보증기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동서발전(주)(▲1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한국은행(▲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수출입은행(▲3등급) 한국은행(▲1등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1등급) 한전원자력연료(주)(-)	금융감독원(▲1등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1등급) 대한석탄공사(▲2등급)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1등급) 한국동서발전(주)(▲1등급)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은행(-) 한국전력기술(주)(▲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1등급)	국립공원공단(▲1등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남동발전(주)(▲1등급)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동서발전(주)(▲1등급)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2등급) 한전KDN(주)(-)
3 년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수협중앙회(-)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2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서부발전(주)(▲1등급) 한국석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전력기술(주)(▼1등급)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전KDN(주)(▼1등급) 한전원자력연료(주)(-)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1등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수협중앙회(▼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2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1등급)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1등급)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1등급)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조폐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2등급)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수출입은행(▲1등급)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1등급) 한국조폐공사(▼1등급) 한전원자력연료(주)(▼1등급)
4 년	국립공원공단(▼1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1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립공원공단(▼1등급) 도로교통공단(▼2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국립공원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2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수협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공단(▼2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2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금융감독원(▲1등급) 도로교통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1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1등급) 한국환경공단(▼1등급)
5 년	대한석탄공사(▼2등급) 한국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3등급)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전KDN(주)(▼2등급)	대한석탄공사(-) 수협중앙회(▼2등급)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8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3. 공직유관단체(파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 분	종합청렴도(43)	외부청렴도(43)	내부청렴도(43)
1 패 인	한국광물자원공사(▲1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1등급)	-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2 패 인	우체국금융개발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2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전력거래소(▲2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1등급)	국립생태원(▲1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2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등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1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패 인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국방기술품질원(-) 사회보장정보원(-)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한국거래소(-)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해양환경공단(▲1등급)	공무원연금공단(-) 국방기술품질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등급) 사회보장정보원(-) 주택도시보증공사(▲2등급) 한국거래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해양환경공단(▲1등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립생태원(-)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등급) 우체국금융개발원(▼1등급) 한국거래소(▲1등급) 한국국제협력단(▲1등급)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1등급)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등급)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1등급) 한국주택금융공사(▼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4 패 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등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2등급) 한국관광공사(▼2등급) 한국국제협력단(▼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1등급) 한국장학재단(▲1등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한국관광공사(▼2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등급) 한국연구재단(▼1등급)	사회보장정보원(▼1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5 패 인	한국콘텐츠진흥원(▼2등급)	예금보험공사(▼3등급) 한국국제협력단(▼2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1등급)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장학재단(▼1등급)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4. 공직유관단체(IV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41)	외부청렴도(41)	내부청렴도(41)
1 배 단	서울신용보증재단(▲1등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2 배 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3등급) 신용회복위원회(▲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2등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해운조합(-)	경찰공제회(▲1등급) 국제방송교류재단(-) 노사발전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1등급) 서울신용보증재단(▲1등급)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1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3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등급) 한국장애인개발원(▲1등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투자공사(-) 한국해운조합(-)	국제방송교류재단(▲1등급) 군인공제회(-) 부산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1등급)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유통센터(▼1등급)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광해관리공단(▲1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등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해운조합(-)
3 배 단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2등급) 노사발전재단(▲1등급) 부산항만공사(▲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인천항만공사(▼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등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1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투자공사(▼1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표준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환경보전협회(▲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1등급) 부산항만공사(▲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2등급) 신용회복위원회(▲1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등급)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표준협회(▲1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2등급) 환경보전협회(-)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대한체육회(▲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등급) 한국재정정보원(▼1등급)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1등급) 한국투자공사(-) 한국특허전략개발원(▼1등급) 한국표준협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1등급)
4 배 단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1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1등급)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1등급)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군인공제회(▼2등급) 인천항만공사(▼2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1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1등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경찰공제회(-) 국립해양생물자원관(▲1등급) 노사발전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환경보전협회(-)
5 배 단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등급)	대한체육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등급) 한국장애인개발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18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5. 공직유관단체(V유형)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15)	외부청렴도(15)	내부청렴도(15)
1 평가	여수광양항만공사(▲2등급)	-	-
2 평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1등급) 울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1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1등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여수광양항만공사(▲2등급) 울산항만공사(▲1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1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1등급) 영화진흥위원회(▲1등급) 한국기상산업기술원(-)
3 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등급)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1등급) 울산항만공사(-) 정부법무공단(▲1등급) 한국노인인력개발원(▲1등급) 한국벤처투자(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평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2등급) 정부법무공단(▼2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1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1등급) 한국벤처투자(주)(▼1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1등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등급)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1등급) 정부법무공단(▼2등급) 한국벤처투자(주)(▼1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5 등급	-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2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1등급)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6. 공직유관단체(연구원)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25)	외부청렴도(25)	내부청렴도(25)
1 등급	한국전기연구원(▲1등급)	-	-
2 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1등급)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1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3등급)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1등급)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2등급)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1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3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1등급) 한국화학연구원(▲1등급)	한국개발연구원(▲1등급) 한국과학기술연구원(▼1등급)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원자력연구원(▲2등급)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1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2등급)
3 등급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등급) 한국기계연구원(▼1등급)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1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2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1등급)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1등급) 한국기계연구원(▼1등급)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1등급)	국방과학연구소(▼1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1등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1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1등급) 한국화학연구원(-)
4 등급	국방과학연구소(▼2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1등급) 한국식품연구원(▲1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1등급)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1등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1등급)	기초과학연구원(▲1등급)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등급)
5 등급	-	국방과학연구소(▼2등급) 한국건설기술연구원(▼2등급)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1등급)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8년 대비 기관유형이 변경된 기관임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5-7. 공직유관단체(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 '18년 대비 등급 변경 정도

구분	종합청렴도(47)	외부청렴도(47)	내부청렴도(47)
1 분야	충북테크노파크(▲1등급)	-	전남개발공사(▲1등급) 전북개발공사(-)
2 분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부산교통공사(-) 시흥도시공사(▲1등급) 안양도시공사(▲1등급)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전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창원시설공단(▲1등급) 충청남도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1등급)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1등급) 시흥도시공사(▲1등급) 안양도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인천교통공사(-) 인천시설공단(▲1등급) 전남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창원시설공단(▲2등급) 충북테크노파크(-)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화성시문화재단(▲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1등급)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1등급)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안양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2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제주테크노파크(▲1등급) 창원시설공단(-)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남도개발공사(-)
3 분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공사(▲2등급) 경남개발공사(▲2등급) 경남테크노파크(▼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2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등급) 대전도시공사(▲1등급) 부산도시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2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 여주도시관리공단(▼1등급) 용인문화재단(-) 울산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화성도시공사(-) 화성시문화재단(▲1등급)	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문화의전당(▼1등급) 경기도공사(▲1등급) 경남개발공사(▲2등급) 경남테크노파크(▼1등급) 경상북도개발공사(▲2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등급) 대전도시공사(▲2등급) 부산도시공사(▲1등급) 부산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1등급) 서울디자인재단(▲1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1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1등급) 용인문화재단(-) 울산시설공단(▼1등급) 전북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충청남도개발공사(▼1등급) 화성도시공사(-)	경기도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대구도시공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도시공사(▼1등급) 부산지방공단스포원(▲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1등급) 울산도시공사(▼1등급)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1등급) 충북개발공사(-) 파주시시설관리공단(▲1등급)
4 분야	강원도개발공사(▼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남양주도시공사(▼1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서울교통공사(▼1등급) 서울디자인재단(▲1등급) 울산도시공사(▼2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충북개발공사(▼1등급)	남양주도시공사(▼1등급) 대구도시공사(▼1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1등급) 울산도시공사(▼1등급)	강원도개발공사(▼1등급) 경남개발공사(-) 경남테크노파크(▼1등급) 광주도시관리공사(▼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1등급) 여주도시관리공단(▼1등급) 인천도시공사(▼1등급)
5 분야	서울시설공단(▼2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2등급) 서울시설공단(▼2등급) 인천도시공사(▼2등급) 충북개발공사(▼2등급)	경기도문화의전당(-) 남양주도시공사(▼1등급) 서울디자인재단(-) 화성도시공사(▼2등급) 화성시문화재단(-)

※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내부청렴도(설문조사 결과),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임(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